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全 賢 俊*

◁ 目 次 ▷

- | | |
|-------------------------|-------------------------|
| I. 서 론 | 4.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대남정책 |
| II.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북한 대남 정책 | III. 김정일 유일체제하의 대남정책 |
| 1.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 목표 | 1.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성격 |
| 2. 김일성의 혁명계승론과 김정일 | 2. 김정일 유일체제하의 남한관련 당면과제 |
| 3. 김정일의 정세인식 태도와 대남관 | 3. 분야별 대남정책 전망 |

I. 서 론

북한은 해방 이후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왔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주민결속강화를, 남한에 대해서는 결속약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내부결속을 통한 한반도 통일달성을 위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반미주의와 반남한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여 왔다. 즉 북한은 미국을 主敵으로, 남한을 從敵으로 취급해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왔다.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한 목적은 소극적 측면에서 내부통합을 통한 김일성 정권 및 김정일후계체제 보위를, 적극적 측면에서 한반도 사회주의화를 위해서였다.

북한 최고권력자 김일성은 생존시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민족해방’을 위해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남한내 혁명역량의 중요성을 인식, 3대혁명역량 강화를 주창하였다. 이후 그는 남한내 혁명역량강화를 위해 남한정부를 부정하고 ‘남조선파쇼론’을 제기, 이의 타도를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였다. 왜 그는 ‘미제 및 파쇼타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가? 그 이유는 독특한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위협선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코저(Lewis Coser)의 주장에 의하면 외부집단과의 갈등은 내적 통합을 증대시킨다.¹⁾ 즉 다른 집단과의 갈등은 집단성원들의 에너지를 동원하게 하고 따라서 그 집단의 단결을 강화시킨다. 투쟁집단들이 집단응집력을 유지·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낸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갈등은 투쟁집단의 생존조건이기 때문에 투쟁집단은 부단히 갈등을 유발시켜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공고화를 위해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확대·과장 하여왔다. 북한은 이를 통해 사회전체를 병영국가화 하였다. 그러나 핵문제 관련 北·美 고위급회담 타결로 주적이었던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명분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신체제의 공고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 및 신정권 유지를 위한 주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고 한국이 그 ‘惡役’을 맡게 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1960년대 부터 북한내 사회주의의 완성을 표방하면서도 남북통일 미달성과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주의식 계속혁명론을 내세웠다. 이에 근거해 김일성은 친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의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김정일은 김일

1) Lewis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ew York : The Free Press, 1956), p.95.

성 생전에 충성스럽게 김일성의 노선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정교화시켰다.

이제 김일성 사후 우리의 관심은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내세우고 있는 김정일이 향후 어떤 대남정책을 채택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첫째,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남정책과 김정일의 대남인식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고, 둘째,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성격 및 김일성의 대남관련 ‘유훈(遺訓)’과 그에 따른 김정일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찰한 후, 셋째, 향후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향방에 대해 전망하려 한다.

II.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북한 대남정책

1.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 목표

북한의 대남정책 목표는 남한을 포함한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에 두어져 왔다. 북한의 사회, 국가를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동당의 당규약은 당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규정하고 있다.²⁾ 여기에서 ‘온 사회’는 물론 한반도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남한을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해주는 중요한 귀절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미제’와 ‘남조선파쑈’를 타도하고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19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기도는 한국의 국제공조적 대응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전쟁이후 김일성은 전후복구와 반대파 척결을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평화통일론을 제시하는 등 대남

2)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적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조선로동당규약 전문 참조.

유화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반대파에 대한 효율적 제어와 성공적인 전후복구를 달성한 이후인 1960년대 초반 부터 대남혁명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것은 직접혁명전략이 아닌 간접혁명전략이었다. 즉, 김일성은 1964년 당중앙위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남한해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 남한내 혁명역량강화, 세계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 등 소위 3대혁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것은 ‘지역혁명론’으로 명명되면서 남한혁명을 위한 기본정책이 되었다.³⁾

김일성이 이러한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김일성이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사상적·조직적 체계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둘째, 남한에는 1961년 강력한 군사정권의 등장과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직접적 공격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주민들의 대정부투쟁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미·쏘 냉전의 심화로 세계는 양분되어 갔고 전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본주의 세력의 힘이 강대해짐으로써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권과의 연대 및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이간이 보다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책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지배체계 확립정책으로,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책은 주한미군철폐, 국가보안법철폐, 남한민중혁명에 의한 친북정부수립 정책으로, 세계혁명역량과의 연대성강화책은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권과의 외교강화와 이를 통한 미국고립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김정일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조국을 통일하는것과 함께 조선혁명의 당면한 2대과업입니다”⁴⁾라고 언급한 것에 근거, 북한의 전통적 대남정책목표를 북한내 사회주의 및 유일체계 확립과

3)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262~282 참조.

4)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418.

사회주의식 한반도 통일로 상정, 분석해 보려 한다.

가. 북한내 사회주의 및 유일체제 확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목표는 한반도를 사회주의식으로 통일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1차 과제는 북한 자체가 우선적으로 이념·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대남우위를 점하는 일이었다.⁵⁾ 물론 모든 정책선택의 사상적 원천은 자주를 근간으로 한 주체사상이었다.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은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다.

첫째, 북한은 이념적 공고성을 유지하기 위해 맑스-레닌주의의 답습,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맑스-레닌주의와의 차별화 및 결별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체계화 하였다.⁶⁾ 주체사상은 초기에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자주성 유지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중·소 중심의 강대국 논리와 그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념·정치·경제·국방·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철저한 자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논리였다.⁷⁾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중·소로부터 자주성을 어느 정도 달성한⁸⁾ 1967

5) 김일성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에서 이미 쟁취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혁명역량은 주로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의 세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내 혁명역량 강화가 최우선임을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p.267~268.

6) 3대혁명역량 강화를 최초로 언급한 김일성의 문건에는 맑스-레닌주의만이 강조되고 있다.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p.268~269. 그러나 북한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지배이념에서 삭제하였다. 북한의 1992년 헌법 참조.

7)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참조.

8)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정강을 통해 “우리가 사상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일군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매우 높아졌으며...오늘 우리나라는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

년 이후 부터는 수령에 대한 충성 강화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수령론이 주체사상의 정수로 변화였고 자주보다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⁹⁾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의 최고형태인 수령론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수령론은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진 주석으로 제도화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정일 등장 이후인 1974년 부터 김일성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¹⁰⁾ 김정일이 김일성주의를 표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 신격화작업을 통한 자신의 확고부동한 입지확립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김정일은 후계자로 선택된 이후인 1974년 부터 김일성주의에 대한 규범을 만들고 김일성의 모든 교시는 반드시 자신의 결재하에 집행되도록 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성공적으로 보지할 수 있었다.

수령론은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 논리는 1986년에 체계화되었다. 이 글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을 사회정치적생명의 부여자인 ‘신’으로 승격시켰고, 이러한 신을 보유한 ‘우리민족은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¹¹⁾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생명을 창조한 신으로 추앙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사이비 종교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신’인 김일성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계급, 성별, 종교, 민족 등에 관계없이 ‘민족’으로 분류하고 교류·협력을 강조하였다.¹²⁾

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주성확립에 대해 자랑하였다.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p.376~377.

9) 崔 星, 「首領體系の 形成過程과 構造的 作動메카니즘에 關한 研究」(高麗大學校大學院 政治外交學科, 1993년 博士學位論文), p.109.

10)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김정일리더십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56.

12) 김일성은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것없이 모두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즉 정주영, 김우중, 카터 등 누구나 수령을 ‘믿고 따르면(지원)’ 김일성교신자로 분류되었고 칭찬과 교류·협력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이다. 반대로 이것은 이러한 준봉(conformity)에 순응하지 않으면 김정일을 포함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의 역량강화를 위해 북한은 민주집중제에 입각한 일당 중심체제를 철저히 강조하여 왔다. 물론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북한에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당원들이 <표 1>에서 처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1>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분포상황

구분	시기	9기 (1990. 5)
대 의 원 수		687명
노 동 자		37.0%
협 동 농 장 원		10.4%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52.6%
기 타		(미발표)
35 세 이 하		2.9%
36 세 - 55 세		56.8%
55 세 이 상		40.3%
대 졸		68.2%
전 문 졸		31.8%
중 졸		(중졸포함)
여 성		20.1%
비 고		※ 사 회 민 주 당 7.4% 천도교청우당 3.2% 무 소 속 1.9%

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계급론을 탈피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pp.23~24.

그러나 이들 당의 강령은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답습¹³⁾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지세력을 통한 이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일당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김정일 자신도 다당제를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강도높게 비판¹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다당제국가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조선노동당은 ‘어머니’ 당으로서 북한사회주의혁명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결과를 감시하고 책벌한다.¹⁵⁾ 만일 당의 강령에서 이탈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당의 이름으로 징계한다. 당은 절대적 권한을 바탕으로 사회전부문에 침투해 있다. 당은 국가, 군, 행정기관, 외곽단체 등을 당원과 세포, 당위원회 등을 통해 감시·통제함으로써 수령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지탱해 가고 있다. 결국 북한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하에 전주민을 기계화·화석화하고 있고 노동당의 충성분자로 전화시키고 있다.

물론 북한은 1989년 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하는 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중요성을 인식,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관료들의 부패, 관료주의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김일성이 해방 이후 지지기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한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및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여전히 유일당중심체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셋째,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자력갱생체제를 도입하고

13) 조선사회민주당강령은 “자주리념은 우리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규제하는 지도리념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이도이념인 주체사상의 핵심을 지도이념으로 천명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1994. 1월호 조선사회민주당강령(초안) 참조. 한편 조선사회민주당 당수인 김병식은 국가부주석이다.

1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93.

15)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어머니 당’을 강조하고 많은 당이 패망한 것은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 주는 어머니 당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행세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관료당으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말하여 그동안 조선노동당도 계급투쟁의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많은 적을 만들어 왔음을 시인하였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있다. 북한은 세계적 분업구조에 편입되지 않고 주체경제 논리에 입각한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작동 논리는 청산리 농법, 대안의 사업체제, 독립채산제 등이 있다.¹⁶⁾

자력갱생체제는 일단 각 협동농장, 각 기업소, 각 행정단위가 책임지고 각 단위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고 충당해야 한다. 물론 국가 자체도 세계 분업구조론에 입각한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지도 않는다. 김정일은 성장전략은 반드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곧 자본주의 분업구조에 편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북한은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필수불가결한 물품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자력갱생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함으로써 경제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1984년 합영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논리적으로는 중국식 개방정책을 비난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을 무분별한 시장사회주의의 도입으로 전가하는 등 특구설치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즉 자력갱생체제의 붕괴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¹⁹⁾ 이것은 국가가 인민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경제체제가 도

16)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고승효(김한민 역),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서울:靑史, 1988) 참조.

17) 김정일은 1992년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글에서 “사회주의원칙으로 부터의 한걸음의 양보와 후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와 후퇴를 가져왔으며 결국에는 로동계급의 당자체가 파멸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식 경제전략의 도입을 극력 반대하였다.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p.94.

18) 김정일은 1986년 “무역을 하여 원유와 콕스탄, 생고무와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야 철강재와 자동차, 트랙또르도 생산하고 경공업공장들을 돌려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도 만들수 있으며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고 말하여 수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p.380.

19) 김일성은 생전에 자본주의요소의 침습을 최소화하는 개방방식인 ‘방충망식’ 개방을 강조하였고,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에서 “오늘 사회주의 배신자들

입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에도 자력갱생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든 김일성이 사망 이전인 1994년 2월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역설하는 등 자력갱생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교시했다²⁰⁾는 점에서 특구중심개방은 매우 한정된 지역에 국한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북한은 북한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해 군사부문의 투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달성해야 할 기본목표는 4대군사노선이다. 즉,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국 요새화, 전인민 무장화이다.²¹⁾ 북한은 1960년대 초반 부터 ‘四化’ 달성을 위해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왔다. 북한은 1961년 19.0%, 1965년 19.0%이던 것이 1970년에 29.4%, 1971년에 31.0%까지 상승하였다. 물론 1972년 이후 부터 군사비비중이 16.0% 내외로 하락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에 대한 할당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민경제비에 대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향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인민경제비를 원안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은 군사비를 인민경제비나 사회문화비에 은닉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

북한은 미국 및 남한과의 군비경쟁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낙후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정책적 역점을 두는 한편, 특구활성화에서 획득된 외화를 통해 인민경제상태의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면적으로 군비확충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특구에서 획득된 외화를 군수산업 활성화에 집중투자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도 자본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자본주의 복귀소동을벌이고 있다”고 중국과 국내의 개방세력들을 비난하였다.

20) 김일성의 서한은 「로동신문」, 1994.2.25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졸고, “北韓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民族統一研究院, 「統一情勢分析 94-09」(1994.4) 참조.

21) 4대군사노선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제시된 후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2) 박재규 외, 「북한군사정책론」(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3), pp.70~71.

나. 사회주의식 한반도 통일

북한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데 있다. 즉 북한 대남정책의 최종목표는 한반도를 북한식으로 통일하는 데 있다. 전술한 바 대로 북한이 각부면에서 자체역량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힘의 우위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극좌모험주의를 채택한 적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시도한 대남정책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民主基地論에 입각한 직접혁명정책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먼저 공산화가 된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기지를 채택하였다.²³⁾ 이 논리는 북한혁명역량에 의한 남한의 직접 공격정책이었다. 북한은 민주기지를 실천하기 위해 군사역량강화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는 1950년 6·25전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사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실패하였다. 전쟁실패 이유는 김일성 개인의 군사모험주의의 결과였지만 김일성은 전쟁실패를 반대파 숙청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 즉 그는 대대적인 숙청과 함께 유일사상 및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매진하였다.

둘째, 地域革命論의 도입이다. 북한은 남한내부의 적극적 지원없이선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남한내 폭력혁명 유도, 이후 평화통일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소위 지역혁명론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은 철저한 대남 이중전략을 수립하였다. 일면 정부간 대화를 추진하면서, 일면 민중에 대한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

23) 김일성은 “해방직후 우리당은… 조선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민주기지를 북조선에 창설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로선으로 규정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224~225. 민주기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김순규,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 민주기지로선,”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211~246;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서울: 백산서당, 1990), pp.187~192 참조.

대화전략은 적십자회담, 남북공동성명, 고위급회담 등으로 나타났고, 공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1960년대 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그것이다.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전술은 남한내 학생, 진보세력과의 연계투쟁, 「범민련」과 같은 비정부적 차원의 공동투쟁기구 설치, 「구국의 소리」와 같은 흑색방송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계급론적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지역혁명론은 남한사회의 발전과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론에 입각한 「전국민족통일전선전술」을 새로이 도입, 지역혁명론의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민족통일전선」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교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거족적인 사업입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²⁴⁾라고 말하여 「전국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최초로 역설하였다.

「전국민족통일전선」은 남북한, 해외를 막론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²⁵⁾하는 단결체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주체는 민족으로 된다. 통일의 주체인 민족은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민족주의자들도 있으며 유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으며 유산자도 있고 무산자도 있다.”²⁶⁾

전국민족통일전선은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 그리고 해외애국력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남의 애국적 민주력량이다.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에는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소자산계급과 애국적 군인 그리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이다.

24) 「김일성저작집 30」, p.550.

25) 위의 책, p.550.

26) 「조국의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67.

북한은 기존의 통일전선과 「전국민족통일전선」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기존의 통일전선은 일반적으로 노동계급 주관하에 노동동맹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전국민족통일전선」은 한 민족내의 두지역사이에서 맺는 민족의 대연합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민족이 일시적으로 두지역으로 분열되어 있고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때문이라고 설명한다.²⁷⁾

「전국민족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첫째, 남과 북의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 둘째, 남과 북의 유명한 정치인들의 연합회의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와 유명정치인연합회의의 상이점은 정치협상회의와 대민족회의가 정당, 사회단체 대표중심이라면 유명정치인연합회의는 개인차원의 연합회의라는 점이다. 정치인연합회의에는 야당이나 재야세력이 포함된다.

결국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국가목표인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수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주객관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정부타도와 이를 위한 「전국민족통일전선」 전술의 구사는 지속할 것이다.

2. 김일성의 혁명계승론과 김정일

김일성은 1967년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공표하였다.²⁸⁾ 여기에서 그는 공산주의 고전 이론과는 달리 국제적 요인을 고려에 넣는 동시에 계속혁명의 관점으로 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과도기와 분리해서 이해하고 사회주의하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과 역사적 임무를 명확하게 하였다.

김일성 주장의 요지는 “일국 혹은 일부지역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되더라도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잔존하는 조건

27) 위의 책, pp.73~76.

28)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1」, p.271.

하에서는…제국주의의 위협을 피할 수가 없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세계혁명의 동시적 승리만이 공산주의의 달성을 가능케한다는 인식하에서 세계적 차원의 계급투쟁과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국적 차원의 혁명이 완수된다 하여도 전세계의 혁명을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영도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⁹⁾

김일성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속을 주장한 이유는 첫째, 사후 비판에 대한 공포심에서였을 것이다. 김일성이 아무리 국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노선이 다른 지도자가 등장하였을 때는 그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스탈린의 예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김일성은 그가 심혈을 기울여 달성한 업적을 누군가 가장 충직한 자에게 전수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누구보다도 충실성과 혁명성이 뛰어난 김정일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이념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정치문화가 강하게 잔존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라 자처한 김일성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친자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하리라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김일성의 정치적 구도하에 후계자로 키워지기 시작한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 대학 졸업후 당중앙위 비서처 참사실에서 1년간, 내각수상 참사실 지도원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1966년 그는 당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이 되면서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67년 5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제기하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매일 두시간 학습 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매진하였고 그 주요도구로 영화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을 맡았고 백두산창작단, 4·15문학창작단, 만수대창작단 등을 만들었다.

29) 崔 星, 前掲論文, pp.164~170.

이 기간에 그는 혁명사적지를 정비하고 김일성 가계우상화에 매진하였다. 김정일은 1969년에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하였고 가극 ‘꽃파는 처녀’ 창작, 연극 ‘피바다’의 영화화 등을 직접 지도하였다. 1970년에는 ‘어느 자위단원의 운명,’ ‘아내의 직장’ 등을 제작하여 김일성을 크게 만족시켰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굳혀지게 된 결정적 사건들은 1971년 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후계자문제는 1971년 4월 부터 비밀리에 토론폰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의 예술적 능력은 김정일로의 후계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김일성은 1971년 6월 부터 후계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피바다’ 가극이 김일성 면전에서 초연을 통해 김일성을 감동시켜고 김일성은 김정일의 특출한 능력을 혁명 1세대들에게 자랑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행동은 혁명1세대들로 하여금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대하도록 암암리에 강제하였다.

임춘추, 김영주를 비롯한 당원로들은 1972년 4월 김일성의 환갑을 기해 김정일로의 세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1972년 2~3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공연된 ‘밀림아 이야기하라,’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을 통해 당원로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고 김정일의 수령과 혁명1세대들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가 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그것은 1974년 2월 당중앙위 제 5기 8차 전원회의를 통해 당내에서 공식화되었다.

3. 김정일의 정세인식 태도와 대남관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은 통일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였고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첫째, 그는 북한사회발전을 통일의 원동력으로 생각하였다. 1974년 「속도전」을 주창하면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조국통일위업을 하루속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³⁰⁾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내 혁명역량강화를

통일의 선차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그는 전쟁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였다. 그는 1974년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한번은 원수들과 맞서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 각오를 튼튼히 가져야 하며...”³¹⁾라고 말함으로써 언젠가는 ‘제2의 해방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우리는 혁명적 대사변을 눈앞에 두고있는것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여야 합니다...전쟁준비에서는 정치적준비와 함께 물질적준비가 또한 중요합니다.”³²⁾라고 말함으로써 남한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셋째, 김정일은 남한이 북침준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동무들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침략과 분렬의 범죄적 목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어보려는 적들의 무모하고도 발악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전야에 처하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³³⁾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김정일은 남한이 북침준비 내지는 ‘평화적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0)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26.

31) 김정일, “온당과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97.

32)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3」, p.309.

33)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437.

4. 김정일 후계체제하의 대남정책

1970년대 김정일은 후계자로서의 자기 위상 정립을 위해 남한으로 부터의 위협을 과장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후계체제를 공고화시키기 위해 남한을 철저히 이용하였다. 김정일은 남한을 ‘북침’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악마’로 인식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악마로 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령중심의 유일사상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³⁴⁾ 물론 이러한 그의 선전선동은 후계자인 그의 용맹성을 인민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에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1970년대 중반이후 부터 남한과의 경쟁에서 뒤진 사실을 발견하고 남한을 더욱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쳤다.³⁵⁾ 1976년 판문점미군살해사건, 1983년 아웅산 한국요인 암살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4) 김정일은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언제든지 한번은 원수들과 맞서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튼튼히 가져야 하며 원수들의 격화되는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세가 긴장하고 투쟁이 어려워 질수록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하며 혁명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전당과 온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97.

35) 김정일은 1974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근에 경제건설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정무원위원회, 부들이 자기사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 교시하였습니다”라고 말하여 경제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김정일, “정무원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139. 그리고 그는 1975년 5월 “우리는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할 준비를 해놓기는 하였지만 결코 그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쟁준비에는 계선이 없습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계속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여야 합니다...더우기 미제침략자들이 우리와의 대결에서 물질기술적 우세를 믿고있는것만큼 우리는 물질적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상황을 확대과장하는 한편, 남한의 경제적 우세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정일,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305~309.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대남강경정책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김정일은 항일무장투쟁을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혁명 1세대들(김일성 포함)의 지지를 통해 후계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적개심과 투쟁심을 과시함으로써 혁명세대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둘째, 김정일은 남한을 ‘인민의 공동적’으로 상정함으로써 후계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독재를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남한경제의 발전은 김정일 후계체제는 물론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의 대남강경책을 통한 내부통합정책은 관료 및 인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획석화시켰지만 독재자의 후손으로서의 자질은 인정받게 하였다. 그 결과 김정일은 1980년 대내·외적으로 공식후계자가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대남강경책은 김정일체제를 유지해 주는 근간이 되고 있다. 아울러 1980년대 김정일의 대남정책 기조 역시 강경일변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1983년 아웅산 한국 정부요인 암살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일은 대남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이 남한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전략전술대로 공격은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³⁶⁾ 김정일의 공격정책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우세를 지속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다.

1990년대 김정일의 대남강경책은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전술적 유효적으로 변화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을 이념적,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도록 하였다.³⁷⁾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 인민들의 사상적 동요 등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36) 「통혁명」에서 발행한 「金日成主義革命論」은 “오직 위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여야만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日成主義革命論」(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선전부, 1974), p.93.

37) 북한은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원인을 세계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그로 인한 사회주의시장의 상실 및 남한과 미국의 전쟁 위협으로 돌렸다. 「로동신문」, 1993.12.9.

남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1989년 이후 북한은 ‘남한의 무력공격’ 내지는 ‘북한붕괴작전’에 대비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남한과의 우호관계를 무기로 제어해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 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1992.2.13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중요한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격어야만 했다. 즉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이다. 물론 북한은 1980년대 부터 이미 대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의 정책전환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용의를 표명하였다.³⁸⁾ 그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대결은 그의 평생소원이었던 한반도통일 달성을 요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부친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해 1984년에 「3자회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先남북관계개선 後미·북회담」 원칙에 입각,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핵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제어하려는 적극적 공세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역으로 김정일은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북-미간에는 3단계에 걸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김정일은 미국으로 부터 세습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³⁹⁾ 따라서 김정일은 ‘敵數의 최소화’전략에 입각,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약화시키고 일단 ‘미국주적 남한종적’ 전술을 수정, ‘남한主敵 미국從敵’전술로 전환하였다.

결국 김정일이 북-미 고위급회담에 적극 임한 것은 남한과 미국, 일본의 3자동맹을 차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남한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늘날 북-미 고위급회담의 타결은 김정일의 승리로 치부되고 있다.⁴⁰⁾ 즉

38) 김일성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저작집 35」, p.366.

39) 미국은 북-미 2단계 고위급회담(1993.6.11)에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3단계 고위급회담(1994.10.21)에서는 핵선제 불사용을 약속하였다.

40) 「평양방송」, 1994.11.6.

마치 1953년 휴전이 ‘김일성의 승리’였던 것처럼, 북·미간 핵협상타결은 ‘김정일의 승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Ⅲ. 김정일 유일체제 하의 대남정책

이제 북한은 김일성 우위의 ‘비대칭적 양두체제’에서 김정일 유일체제로 변화되었다. 즉 북한은 김정일만이 유일한 최고통치권자로 군림하는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보다 일관성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을 대외적으로는 북·미고위급회담의 원만한 타결을, 대남적으로는 「전국민족통일전선」과 「10대강령」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중대과업으로 설정, 추진하려 하였다.⁴¹⁾

최고권력자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관철을 그의 최대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 중 북·미고위급회담을 관철시켰고, 사회주의발전을 위해 전인민적 소유의 확대, 경공업 공장의 가동을 확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유훈’ 중의 하나인 대남정책 전반을 어떻게 운용해갈 것인가?

1.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성격

향후 김정일이 대남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여 갈 것인가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성격은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체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김정일이 전임자의 정책을

41) 김일성은 1994년 7월 2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 하였고 북한은 「통일3대원칙」과 「10대강령」을 관철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명자씨의 증언은 「말」, 1994.11월, p.106 참조.

답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언급하면 김정일체제는 김일성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다. 김정일 체제가 김일성체제의 연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은 사후 비판을 두려워하여 친자인 김정일에게 정권을 이양하였고, 김정일은 김일성 혁명사상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후계자 지위를 공고화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북한 정치체제의 주요골격은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 이후 정립된 것으로서 김정일 자신이 체계화의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김정일이 김일성 생전의 의도대로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 통치할 것을 맹세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김일성 생존시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수행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가 후계자로 책봉된 이후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는 당조직정비와 당관료와 당원들에 대한 충성심제고와 통제강화였다. 그 도구는 당조직지도부였다. 당조직지도부는 당중앙위 최고실무지도기구로써 실질적인 당 조직,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김부자 유일지배체제의 직접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당중앙위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당중앙위 정치국은 명목상 당최고기구일 뿐 당정책입안에는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국은 상징기구이고 비서국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당총비서 직속으로 조직비서 및 선전선동비서가 있고 그 아래로 각 부문담당비서들이 포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가 된 이후 그의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부심하였다. 김정일은 1967년 부터 추진해 왔던 유일사상체계확립이 어느 정도 달성되자 1973년 부터 1974년 사이에 유일지도체계확립을 위해 매진하였다. 김정일은 모든 문건이 하급기관으로 하달되기 전에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하는 한편, 1974년 4월 당원들에게만 배

42) 북한에서 최초로 ‘유훈’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7월 19일인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 7.19일자 “우리당과 인민은 혁명을 개척한 자기수령의 이 유훈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포된 비밀문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 형식적이었던 유일지도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였다.

김정일이 유일지도체계 확립에서 기본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은 우선 당조직기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당사업에서 기본핵으로 되는 당·군·국가 간부사업체계를 재정비 수립하는 문제, 당사업지도검열체계의 정비, 당간부대렬의 정화, 지도이론과 방침·방식의 침투, 간부·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그의 지도체계의 정비강화, 당홍보사업체계의 정비수립문제 등이었다.

우선 당조직지도부가 당·정·군 전반에 걸친 간부문제를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세우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래에는 간부문제를 당간부부의 지도하에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취급하고 있던 것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했다. 즉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지도부장 겸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하에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간부사업체계를 세웠다.

이와함께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의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 노동해임, 교육훈련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간부사업지도서를 직접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했다.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의 ‘비준’제도를 더욱 체계화시켰다. 당내 경제부서를 제외한 부서에는 간부과를 신설하고 조직지도부 해당 간부담당과와 협동하에 산하 경제·교육·과학·문화·예술·언론·보도·출판 부문의 간부문제를 사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그것도 임명결정권은 조직비서에게 집중시켰다.

결국 오늘날 북한에 엘리트들의 파벌과 엘리트간 파벌투쟁이 종식된 것은 김정일의 간부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전인민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일이었다. 김정일은 사상개조사업을 통해 ‘전인민의 김일성주의자화’ 사업에 온 정열을 다바쳤다. 이 사업을 위해 그는 당관료 및 당원들에 대한 사상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관료와 당원들을 김일성 맹신자로 만들기 위해 1974년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준수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10대원칙재토의사업」을 시작하였다. 「10대원칙재토의사업」이라는 것은 당의 각 세포별

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1개조항씩을 학습하면서 개인별로 입당 이후 현재까지 당생활을 해온 자신의 행적을 그 조항과 연결시켜 반성하고 일종의 ‘고해성사’인 자아비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일은 이 사업을 위해 ‘총화’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이 사업은 김정일후계체제에 승복하지 않는 구당원들에 대한 숙청의 도구였다. 즉 「10대원칙」은 북한판 ‘10 戒名’으로서 누구나 한가지는 잘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를 이용하여 충성심이 약한 수많은 당관료와 당원들을 ‘철직’시키거나 산간벽지로 강제이주시켰다. 이 사업은 항상 ‘종파’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김일성을 만족시켜 주었고 후계자 책봉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셋째는 경제발전사업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사업을 기한내에 완결하기 위하여 매진하였다. 제일 중요한 경제추동방법은 3대혁명소조운동이었다. 그는 3대혁명소조를 이끌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이와 함께 ‘속도전,’ ‘70일전투’ 등을 벌였다. 이것은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사업방법이었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최단시간내에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방법이었다. 특히 그는 ‘70일전투’ 기간에는 모든 ‘총화’를 중지하고 전투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물자지원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지정된 사업을 ‘통이 크게,’ ‘번개처럼’ 해치웠다. 그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으로 확대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100일전투,’ ‘200일전투’등을 수립, 비록 내용은 형식적이었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이것 또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대만족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제1요인은 물론 최고권력자 김일성의 장자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 고려해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전적 후계책봉이 성공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⁴³⁾ 어느 사회나 출세를 위해서는 배경과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한처럼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국가에서의 최고리더는 진정으로 ‘초인

43) 중국에서 모택동에서 화국붕에게로의 권력이양 실패 사례.

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독재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거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력, 정보획득력, 분석력, 판단력, 추진력 등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도 최고권력자 김일성의 후광 이외에 어느정도의 통치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고 실제로 그는 김일성이 '흠족해' 할 만큼 능력을 발휘하였다. 김일성은 자식이 아닌 '정치적 동지' 입장에서 김정일을 칭찬하였고 오히려 만년에는 김정일을 의지하면서 생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김일성과 김정일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적 유대관계' 이상의 '혁명동지관계'였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은 명실공히 '一軀兩頭' 관계로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다.

2. 김정일 유일체제하의 남한관련 당면과제

김정일은 1970년대 '속도전·70일전투식' 건설방식의 폐해와 1980년대 '기념비적 대건축물' 축조로 인한 재정낭비 등으로 인해 인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인 경제계획에 의한 건설사업이 아니고 '속도전식' 경제사업은 체계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축물은 김일성부자 우상화에는 기여하였을지 모르나 인민경제를 파탄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김정일의 정치적 인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향후 만일 김정일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리더쉽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특구활성화에 매진하고 이와 관련 미국과의 화해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을 충실히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남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김일성의 남한관련 유훈은 90년대 통일이다. 따라서 유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김정일의 대남관련 국가목표는 통일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북한식 통일이다. 김일성은 생전에 통일형식으로 연방제를 주장하였고 그 명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이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대남정책 목표는 남북통일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선전선동⁴⁴⁾을 지속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대남정책 전망

북한은 1994년 7월 20일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김영남 부총리가 발표한 추도사를 통해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노선을 견지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한 통일달성 및 자주·평화·친선 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 발전이 향후 김정일체제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김일성 정책 고수를 천명하였다.⁴⁵⁾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인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내부체제 강화를 위해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더욱 심하게 전개할 것이다. 그것은 제1의 주적이었던 미국대신 남한으로 주적으로 대체하는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유지, 경제성장 등을 위해 미국과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주적개념에서 도출된 반미주의는 그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통합을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종적이었던 남한을 주적으로 변경해 가고 있다.

북한이 전체적인 탈냉전구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북한의 결속력은 공동의 적의 존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작스런 공동의 적의 상실은 북한주민들을 정치적·정신적 아노미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것은 곧 정권붕괴 내지는 체제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 주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김정일은 1989년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이후 우려했던 미국의 물

44) 「중앙방송」, 1994.10.24.

45) 「로동신문」, 1994.7.21.

리적 공격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북-미고위급회담의 순조로운 타결로 인해 체제체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 '제2의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열세를 면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남한 경제를 제압하기 위해 제2체제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김정일은 1983년 이래 경제개방을 가속화하여 왔고 1991년에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였으며, 1993년에는 제3차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구식 개방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김정일은 극히 제한된 개방형태인 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과실을 획득하고 그것을 군사비 및 인민경제비에 충당함으로써 군사력 증강 및 경제성장을 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김정일은 김일성시대와 같이 「전국민족통일전선」 형성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이다. 김정일은 남한정부를 주적으로 강도높게 비난하는 일방, 민족론에 입각, 경제·사회·학생·노동·야당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국민족통일전선」전술은 연방제통일방안 실현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곧 김일성 유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넷째, 김정일은 주한미군철폐에 주력할 것이다. 그 첫단계 작업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 자체를 거부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을 설득, 정전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대체문제를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부정할 것이고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연방제통일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김정일정권의 목표는 주한미군철폐일 것임은 자명하다.